

지역 일자리 창출 · 고용 안전망 강화

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올해 400여개 기업 2000여명 일자리 창출 목표

전북도가 자동차부품 산업 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올해 132억 원을 투입, 위기 기업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해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업을 총괄하는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은 위기 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 여력 확대를 위해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위기 근로자를 흡수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이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전직(轉職) 지원 등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현재 도내 12개 혁신기관에서 기업 지원, 창업지원, 친환경 미래차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전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과 부품 고급화, 기술 애로 지원사업, ▲'캠캠프합기술원'은 거래 다각화를 위한 물류비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증설 패키지 지원사업을 모집 중이다.

또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식품 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사업,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위기 산업 기업에서 스마트팜 분야로의 창업지원과 농식품 기업으로 전직훈련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래형자동차 신기술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기업지원 사업도 추

진하고 있다.

▲전북창업공유지원원은 홀로그램분야, ▲우석대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수소전기산업 분야,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미래형 특장차분야를 지원대상을 선발 중이다.

아울러, ▲익산, 김제, 완주 '고용안정 선제대응센터'는 위기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위기 근로자 전직 성공 정착금 지원, 재직자 교육훈련사업 등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북도 고용안정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중

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2024년까지 약 1,000억 원을 투입,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1차년도인 지난해는 코로나19 약재 속에서도 136억 원 투입해 1,82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중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 일자리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기산업과 위기 근로자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기후재난시대 여성 위치 · 역할 포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소장 이수인)는 '기후재난 시대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포럼의 주제발표자인 전덕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은희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그린뉴딜에서 경제성장과 환경 이슈가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재난 시대의 여성권과 젠더평등에 관련된 이슈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요청을 주장했다.

토론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홍성임 전북도의원, 김선철 기후정의활동가,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부장, 태리명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정책연구원이 참여, 기후위기의 성평등,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 환경생태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연대를 통한 정책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임 도의원은 "지자체의 기후위기에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포럼을 통해 전북도 정책의 젠더 감수성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기후 위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노동의 증가와 여성이 남성대비 일자리 불안을 더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젠더 주류화를 통한 정책과 사업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자체 상생협의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최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일 전북도와 3개 지자체(군산, 김제, 부안)가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군산, 김제, 부안의 부단체장과 전북도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의 논의는 지자체 간 불거진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군산시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개발부지형 사업과 관련해 역사적·정서적 관점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으며, 김제시와 부안군은 조속한 새만금 개발 관점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향후 추진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모델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수시 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소통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 중에 지자체 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AZ 코로나19 백신 맞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세종시보건소에서 AstraZeneca(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전북도, 여름철 부정 축산물 유통 사전 방지 총력

전북도가 여름철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시·군, 명에 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15개 반 81

명)을 구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도내 164곳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여름철 소비가 많은 즉식 섭취 및 가정간편식 축산물 제조·판매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군 및 명에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사망자 보조금 지원

전북도, 1인당 1000만원 위로금 · 최대 300만원 장례비

전북도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난 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김염병 전과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반드시 선 화장 후 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다.

지급 절차는 도내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급 적

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에게는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주소지 중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2020년 3명, 2021년 5월말 기준 50명(전주 3, 군산 2, 익산 3, 정읍 2, 남원 2, 김제 11, 진안 1, 무주 1, 임실 2, 순창 17, 고창 4, 부안 2)이다.

이 중 2020년도 사망자 3명과 2021년 사망자 43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7명은 향후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옥 도 노인복지과장은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위로금 등 장례 관련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동물용의약품 일제 점검 추진

전북도가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개소, 동물병원 215개소,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가기관매입소 154개소 등 총 397개소이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대상은 도내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